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10. 26. (수)	공보담당관실	02-6788-3655
위 원 회	여성가족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서기관 황지현 (02-6788-5643) 서기관 표승연 (02-6788-5644)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진행

- 여성가족부 기능 이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중 소극적인 정보공개 지적 -

-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 예방 종합 대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지적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장(본관 550호)에서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로 알려진 여성가족부 기능 이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소극적인 정보 공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부족, 의견 수렴 절차의 형식적인 진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양성평등가족본부로 변경되는 개편안에 대하여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 현재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확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 당초 대통령

공약인 부처 신설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젠더 갈등 심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응,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 단체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내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유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 키즈 존 확산 추세 등 출산 가정 차별 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파악, 양육비 이행관리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노력, 양육비 이행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신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해

태풍・폭염・장마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공정률 제고, 마약류 의약품의 손쉬운 구매 환경 개선,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마약 예방 종합 대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외에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의 지속적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지원기관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내일(10.27.) 오전 10시 서대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는 현장시찰을 끝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향후 위원회의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끝.